

2023년 8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박세진	8/6	[뉴스리뷰]북한, 7·27 열병식서 대미 위협..."멸망 걱정해야" [뉴스13]우크라이나 인근 러시아 본토에 미사일 공격...개전 후 처음	
안지연	8/13	[일요와이드] 끊이지 않는 살인 예고..."처벌근거 필요" [뉴스 13] 'AI에 게시물 이용' 네이버 약관 불공정성 검토	
김홍태	8/20	[뉴스1번지] '신림 흥기난동' 조선 기소..."열등감 속 게임하듯 범행" [일요와이드]"합의 안되면 공탁"...형사공탁제도 '악용'	
임윤주	8/27	[뉴스워치]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해야 [뉴스오늘] 규제 못해 쌓이는 '정당 현수막'...환경은 뒷전?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2023. 01. 31	-
활동	박세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023. 05. 31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3 8/6(일)	박세진	지난 28일 연합뉴스TV의 단독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의 발표를 인용해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백신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천8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작년과 재작년의 폐기 금액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질병청이 "2022년 이후 접종률이 예상보다 저조해 불가피하게 백신 폐기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위해 많은 양의 백신을 한꺼번에 들여오면서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XBB 변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백신 접종을 오는 10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는 정부가 백신 공급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비판하는 연합뉴스TV의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애초에 다소의 불용 백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나 정부 재정상태가 어려운 만큼, 이를 최소화해야 하는 부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 양질의 리포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8/13(일)	안지연	챗GPT 등의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저작권이나 이를 둘러싼 법 제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에서는 지난 5일 오후 1시 뉴스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이버는 블로그 게시물 등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자사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콘텐츠 저작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전하며 네이버 이용약관은 '콘텐츠는	8월 5일 제작된 [경제단신/'AI에 게시물 이용' 네이버 약관 불공정성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인공지능 자체의 문제를 담당 기사가 다룬 것이 아니라 경쟁당국의 불공정 약관 문제 점검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40초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 단신 특성상 다양한 내용을 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세계적 이슈가 되면서 다양한 리포트로 이 문제에 접근해왔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기술 등의 연구 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및 계열사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AI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슈도 등장했습니다. 생성형 AI는 학습을 통해 유사한 콘텐츠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는 저작권자들이 권리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자신들의 콘텐츠 이용에 대한 허락과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 생성형 AI로 인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는 사실만 간략하게 전달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이버 이용약관이 어떤 점에서 이용자의 콘텐츠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견해와 함께 네이버 가입자들의 관련 내용 인지 여부 등을 덧붙였다면 이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4월 이후의 경우, [4월1일] 일식 차단-개발 중단 요구...생성형 AI 부작용 우려 [5월27일] 인기 고는 'AI 커버국'..."저작권-실연권 침해" [6월8일] 막을 방법 없는 'AI작 웹툰'...보이콧 나선 작가들 [6월9일] '챗GPT 아버지' 샘 울트먼 "잠재력 있지만 피해 줄 수도" [7월1일] 윤리문제 대두한 인공지능...AI 규제 주도권도 경쟁 [7월25일] AI발 가짜뉴스에 눈 뜨고 코 베이는데...규제는 미비 등의 리포트를 통해 AI의 윤리 문제와 각국의 규제 동향, 저작권 논란, AI의 미래에 대한 창시자의 견해 등 다양한 내용을 여러 편에 걸쳐 다뤘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 8/20(일)	김홍태	이번에 보도된 흥기 난동 사건은 모두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건마다 고유의 배경과 동기가 있지만, 이들을 연결하는 공통된 것은 사회의 냉소와 무관심, 그리고 혐오라는 점에서 경중을 울리고 있습니다. '신림동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혐오 글과 게임 중독이 범행의 기폭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부정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당 흥기 난동사건'에서는 피의자 최원종의 정신질환과 그에 대한 무관심이 큰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이는 사회가 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발생한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이후의 조사 과정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태도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집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사건의 보도와 분석은 상세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책 마련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필요해 보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사회적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 대책을 주시하면서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대안 제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경시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직시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을 위 보도들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3 8/27(일)	임윤주	다음은 19일 뉴스에서는 정당 현수막 관련 현 상황을 보도했는데요, 뉴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거리 곳곳에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근 주민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당 현수막 처리 문제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더 많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가능성이 큼니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고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등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에 제소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폐현수막은 재활용도 잘되지 않아 창고에 쌓여있거나, 쓰레기 처리장으로 옮겨집니다. 일부 지자체는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나 마대,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소각하거나 땅에 묻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 쓴 현수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악화된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현수막을 소각할 경우 유해 화학 물질 배출 문제와 매립되었을 경우 제대로 썩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TV도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었는데요.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은 보도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 도시의 미관, 재활용의 어려움, 환경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 사항들을 다양한 취재를 통해 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법안 통과 진행 과정도 보도에 포함된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현수막 재활용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사안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심층보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박세진 시청자평가원(23. 08. 0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1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한주동안 우리나라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 가장 활발히 논의되었던 주제는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북한의 전승절과 관련된 이슈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공개하는 무기체계와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서 한반도 및 국제정세의 향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북한의 전승절 행사와 관련한 다양한 보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8일 저녁 뉴스에서는 27일 야간에 진행된 북한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주요 무기와 행사 참석자의 발언에 대해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주요 무기는 무인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식전 행사 간 시위 비행에 나선 북한의 전략무인정찰기 '셋별 4형'과 공격형 무인기 '셋별 9형'이 각각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무인공격기 리퍼의 외관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무인기들이 미국의 무인기와 형상은 비슷하지만 상승 고도나 비행거리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고체연료 기반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8형'과 액체연료 기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7형'도 공개 됐으나 기존에 북한이 공개한 무기들과의 차별성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을 초청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이 없었던 점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라고 전하면서, 그 이유는 정세 긴장의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김 위원장 대신 열병식에서 연설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방한을 '침략 야망'이라고 비난하며 대미 위협 발언을 쏟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외에도 외교 및 안보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번 열병식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7월 30일 방송된 일요와이드에서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초청해 이번 행사의 외교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차 연구위원은 이번 열병식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북한에서 외빈을 초청한 첫 번째 행사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을 초청한 이유를 3가지로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응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북한 정권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며, 세 번째는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이상 없이 군사력 건설에 매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증임에도 대표단을 이끌고 이번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 연구위원은 북한은 러시아가 필요한 포탄 및 무기를 수출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적인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가 정립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북한의 향후 외교, 안보 정책을 전망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각도로 분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연합뉴스TV에서 여러 외교, 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은 관련 사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가장 큰 우방국인 중국의 대표단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중국은 이번 북한의 열병식에 우리나라의 국회 부의장 격에 해당하는 리홍중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하는 당정 대표단을 파견했고, 시진핑 주석은 친서를 통해 국제정세와 관계없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보다 격이 높은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과거로부터 북한의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인 중국의 의도에 대한 분석은 비중있게 다루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이 중국 대표단을 위해 마련한 연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김여정이 외국인사 앞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소위 '백두혈통'을 내세워 중국 대표단을 맞이했다는 것은 여전히 중국과 북한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번이 김여정의 첫 번째 외교무대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고려한 가운데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8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 2대가 격추되었다고 보도했고, 같은 날 CNN도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에서의 반격작전이 매우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먼저 러시아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29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러시아 항구도시 타간로그에 미사일 공격이 발생해 20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러시아 본토를 향해 드론이나 포탄이 아닌 미사일이 날아온 것은 개전 이후 처음이자 극히 드문 일이라는 서방 언론의 분석을 전하며,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소행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30일에는 우크라이나 군의 공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한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의 전쟁상황을 다뤘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한 노베와 카르코베 동쪽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맞서기 위해 구축한 대전차 방어선

“용의 이빨”에서 우크라이나 군용차량의 공격이 식별되었는데 이는 러시아가 3중으로 구축한 방어선의 일부가 뚫린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지원을 촉구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쟁의 국지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세 변화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제고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서방국가들이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러시아는 아프리카를 서방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군 확보를 위한 외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보도에서 전쟁 상황과 함께 이러한 양측의 외교적인 노력을 전했다면 현 상황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루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뉴스TV는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한 보도와 함께 정부의 코로나 백신 수급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8일 연합뉴스TV의 단독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의 발표를 인용해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백신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천8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작년과 재작년의 폐기 금액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질병청이 "2022년 이후 접종률이 예상보다 저조해 불가피하게 백신 폐기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위해 많은 양의 백신을 한꺼번에 들여오면서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XBB 변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백신 접종을 오는 10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는 정부가 백신 수급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비판하는 연합뉴스TV의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3. 08. 1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1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근 흥기 난동으로 인한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림동 사건과 서현역 사건 이후 유사 범행 예고가 온라인에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들이 무분별하게 등장하는 원인으로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먼저, 지난 6일 <일요와이드>에서는 잇따라 올라오는 살해 예고글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유사 범죄를 예고하는 글과 함께 흥기 인증, 젠더갈등 구도 등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2차 가해를 키우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즉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하면서 정보통신망법에 불특정 다수에게 해악을 끼치는 글이나 영상을 올릴 경우,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7일 오후 1시 뉴스에서는 살해 예고글 작성자에 대한 검거와 구속 송치에 대한 내용을 전했는데, 보도에서는 7일 오전 7시까지 59명의 살인예고글 작성자를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0대 미성년자이며 검거된 상당수는 장난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이들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림역 흥기난동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유사 범죄에 대한 내용이 빈번하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 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적절한 처벌 근거의 부재와 과거 온라인을 통해 허위로 테러를 예고하는 등의 유사 범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사태를 키운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보도들은 관련 범죄 및 행위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사회적 제도나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 예고글 작성자들에 대한 처벌을 논하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 타인을 해할 의도 없이 장난이라도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챗GPT 등의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저작권이나 이를 둘러싼 법 제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TV에서는 지난 5일 오후 1시 뉴스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이버는 블로그 게시물 등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자사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콘텐츠 저작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전하며 네이버 이용약관은 ‘콘텐츠는 인공지능 분야 기술 등의 연구 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및 계열사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AI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슈도 등장했습니다. 생성형 AI는 학습을 통해 유사한 콘텐츠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는 저작권자들이 권리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자신들의 콘텐츠 이용에 대한 허락과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 생성형 AI로 인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는 사실만 간략하게 전달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이버 이용약관이 어떤 점에서 이용자의 콘텐츠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견해와 함께 네이버 가입자들의 관련 내용

인지 여부 등을 덧붙였다면 이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해 수능은 N수생 응시 비율의 증가가 예견되었는데, 지난 6월,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수능 난이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첨단학과 증원, 의대 선호 현상의 심화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6일 오후 5시 뉴스에서는 첨단학과 증원과 의대 선호 현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수능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이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하면서 올 해 수능에는 49만 1천여 명이 지원할 것이라는 종로학원의 예측을 인용했습니다. 이 중 졸업생은 34.1%로 1996학년도 수능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올 해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지원자가 각각 지난해보다 1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7일 <뉴스프라임>에서도 졸업생 응시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평가원이 주관하는 9월 모의평가의 중요성과 성공적인 수능 결과를 얻기 위한 수능 입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자신의 실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본인의 취약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는 올 해 수능이 예년에 비해 졸업생 응시 비율의 증가와 원인, 9월 모의평가가 중요한 이유를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짚어주어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먼저, 데이터의 시각화에 대한 것입니다. 보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수능 고사장 내의 장면이나 수능 문제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 등 수능과 관련된 화면을 전달하면서 이 보도는 수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보도의 내용에서 언급한 것처럼 졸업생 응시자 예측 비율과 6월과 9월 모의고사의 졸업생 응시자 증가폭과 첨단학과의 증원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나 표로 제공해주었다면 시청자가 보도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입시 전문가들의 견해만 전했다는 점이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입시 전문가가 수능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실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체감은 어떤지, 어떤 요인이 N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견도 다뤘다면 보도에서 언급한 N수생 응시 비율의 증가 원인인 첨단학과 증원 및 의대 선호 현상 심화 등에 대한 뒷받침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폭우와 폭염이 이어진 탓에 소비자들은 낮아진 물가상승률을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국제유가 등 일시적인 요인들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올 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는 이에 대한 내용을 지난 7일 <뉴스워치>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폭염과 장마로 인한 농축산물의 가격 급등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건비와 임대료, 재료비까지 올라 외식 물가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분석을 인용하여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4.5% 상승하여 IMF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으며 외식 물가 주도의 높은 서비스가 그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달에는 교통요금 인상도 이루어져 지난 달 감소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자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 감소와 일부 정유사의 가동 정지로 유가의 지속적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석유 관련 전문가의 견해와 물가 불안 요인이 많아 올해 성장률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감소와 다르게 정작 소비자는 체감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원인을 설명할 때 적절한 시각적 자료를 덧붙여 현재의 상황을 잘 전달하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대한 자영업자의 입장을 함께 보여주어 그 설명력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견해도 덧붙여 시청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통해 내용을 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각적 분석이 뒷받침 된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3. 08. 20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1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최근 흉기난동범과 관련하여 흉악범들에 대한 '머그샷 거부권'에 대하여 보도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는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길 수 있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 제도가 가해자의 형량 감경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11일 뉴스1번지인데요,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인 '신림동 사건'의 조선이 구속 기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분당 흉기 난동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 10일 맨 얼굴로 취재진 앞에 나와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로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또래 남성에게 대한 열등감과 분노가 범행 동기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로 인해 고소 당한 것이 범행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함께 게임에 중독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게임 중독이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조씨의 범행 이후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이모씨도 함께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이씨는 올해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여성혐오글 1,700개를 인터넷에 올리고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최근 살인 예고 글 범죄 중 처음으로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구속된 살인

예고 게시자는 12명이며, 검찰은 앞으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1일 뉴스에서는 '분당 흉기 난동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 10일 맨 얼굴로 취재진 앞에 나와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그는 수정경찰서를 나서면서 사망한 피해자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범행동기로 "스토킹 집단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고 합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원종은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고, 경찰은 경찰서 1층 로비부터 정문을 지나 호송차로 향하는 동선을 비교적 길게 공개했습니다. 지난 9일 뉴스에서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되며, 경찰은 그가 3년 전 중단한 정신과 치료가 이번 범행의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에 걸친 집중 조사 결과, 최 씨는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는 자신을 스토킹하는 집단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이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검색 키워드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는 판단 하에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또한, 그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정도의 죄의식만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 중 스토킹 조직원이 있다고 믿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최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흉기 난동 사건은 모두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건마다 고유의 배경과 동기가 있지만, 이들을 연결하는 공통된 것은 사회의 냉소와 무관심, 그리고 혐오라는 점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신림동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혐오 글과 게임 중독이 범행의 기폭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부정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당 흉기 난동사건'에서는 피의자 최원종의 정신질환과 그에 대한 무관심이 큰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이는 사회가 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 발생한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이후의 조사 과정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태도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집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사건의 보도와 분석은 상세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책 마련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필요해 보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경시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직시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을 위 보도들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토요일에는 최근 흉악범들의 신상 공개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재 모습과 크게 다른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입건 당시 사진인 '머그샷'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의 경우, 운전 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진이 공개되었으나, 현재 모습과 차이가 있어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며, 더불어 다른 흉악범들 역시 실물과 사진이 다르거나 얼굴을 가린 사진이 공개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어 머그샷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머그샷'의 촬영과 공개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흉악범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공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민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생사가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과연 누구 편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해야 될지..."라며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국회에는 흉악범들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위 보도에서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와 일반 시민의 안전 사이에서 어떠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인권보호가 강조되는 느낌입니다. 반면에 머그샷 공개를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토요일의 위 보도는 현시점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보이며, 시청자들에게도 이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머그샷 공개에 대하여는 인권보호 측면도 경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3일 일요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는 피해자 개인정보를 몰라도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길 수 있게 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 제도가 가해자의 형량 감경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A씨의 경우, 피고인이 법원에 갑작스럽게 돈을 맡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했는데, 선고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이 기습 공탁은 피고인이 양형 자료로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 성범죄 등의 경우 피해 회복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특례 제도는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일방적인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 측이 이를 일종의 무기로 사용하며 합의를 강요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탁 확인은 공탁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나, 피해자들이 기습공탁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법원과 검찰의 고지가 있어도 상황이 급박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내기까지 시간이 급박하다고 합니다. 범행에 대한 반성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기습공탁에 피해자들의 불안과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현재의 형사공탁 특례 제도는 피해자의 권리와

가해자의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좀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하고 있는 데요,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시행은 피해자의 회복과 합의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취지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가해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으며,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탁이 이루어지는 점은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가해자와의 화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한 절차 개선, 공탁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제공, 그리고 법원과 변호사들의 역할 강화 등이 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공탁 특례 제도는 그 자체로 상당히 좋은 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현장에서의 운영과 관리 문제로 인해 그 본래 의미를 잃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3. 08. 27 방송) : <바로보는 TV 올부즈맨 61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한 주는 연합뉴스TV를 통해 과거 보도했던 내용들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16일 <뉴스워치>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8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10인 또는 20인 이상 사업장 15만 9천 개소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재정지원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 사정 등을 이유로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제도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보도는 그동안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의무화가 진행되는 시점을 알려주는 보도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신 뉴스로 짧게 보도된 점이 다소 아쉬웠는데요, 시의성이 높은 보도로써 조금 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었다면, 더 풍부한 뉴스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에서도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기준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할 휴게시설의 최소 면적, 위치, 온도 등이 덧붙여졌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도 말미에 언급하였듯,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적인 정보가 있었다면 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화가 된 만큼 사업장 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해당 내용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사회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안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일 뉴스에서는 정당 현수막 관련 현 상황을 보도했는데요, 뉴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거리 곳곳에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근 주민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당 현수막 처리 문제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더 많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가능성이 큼

니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하고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등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폐현수막은 재활용도 잘되지 않아 창고에 쌓여있거나, 쓰레기 처리장으로 옮겨집니다. 일부 지자체는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나 마대,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소각하거나 땅에 묻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 쓴 현수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악화된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현수막을 소각할 경우 유해 화학 물질 배출 문제와 매립되었을 경우 제대로 썩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TV도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었는데요.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은 보도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 도시의 미관, 재활용의 어려움, 환경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 사항들을 다양한 취재를 통해 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법안 통과 진행 과정도 보도에 포함된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되어 있으며, 법안 통과 이전까지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서 지적하였듯,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현수막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범죄 예고 및 실제로 이어지는 범행들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보도한 20일 <일요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수년 전부터 묻지마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진행되어왔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사회에 증오심을 표출할 목적인 범죄에 대해선 두 배까지 형을 가중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무차별 범죄자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묻지마 범죄로 규정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있는 상황에서, 처벌 하한선을 높이는 것이 무의미하던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조항을 신설하고, 가석방 요건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흉악범죄자를 영구 격리할 수단을 마련하고, 혹시 모를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게 해당 법안의 취지입니다. 법무부 또한 국회와는 별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복지부와 협의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시행하기에는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본 보도는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과거 발의된 법안을 정리하여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의료계 등의 입장 등을 전달하는 등 깊이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

니다. 몇 가지 덧붙였으면 하는 것으로, '묻지마 범죄'는 2022년 경찰청이 '이상동기 범죄'라는 이름으로 관련 범죄 분석 및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년 넘게 언론은 물론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며 굳어진 용어이긴 하나, 관련 범죄들이 '묻지마 범죄'로 정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어왔습니다. 논의 끝에 경찰청에서 정의한 용어로, 향후 해당 범죄 표현에 고려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보도 앞부분에 언급되었던 발의된 법안들의 진행 현황까지 포함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법안들이 왜 통과되지 못하였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논의 지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원 학생생활지도 지침에 관해 보도한 17일 <뉴스17>와 18일 <뉴스 프라임> 살펴 보겠습니다. 교육부는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휴대전화와 같이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교원이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마련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는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문제 학생 교실 내 분리, 교실 밖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등이 가능하며, 반성문 작성 등 특정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폭력 행위로 교사나 교우들을 위협할 경우에는 제압도 가능합니다. 학생의 징계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때 학부모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합의되지 않았거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시간 이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상담을 즉시 중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8일 보도는 발표된 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한 교원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생활지도 고시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문제학생을 분리할 때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지,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를 권고하도록 한 조항에 역시 '권고' 수준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치원 교원들은 대부분의 내용이 권고에 그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살펴본 보도에서는 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였고, 후속 보도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여 완성도 있는 뉴스가 보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두 고시안을 발표했는데요. 유치원 교원 관련 고시안은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된 가운데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만 강조되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 2023년 8월 6일 04시/ 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연합회 부총리(미디어학과 조교수)</p>	<p>일시/장면설명 2023년 8월 13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안지연 시청자평가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연혁의 역사)</p>
<p>일시/장면설명 2023년 8월 20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김홍태 시청자평가원 국민은행 본부장(인사) 연세대학교</p>	<p>일시/장면설명 2023년 8월 27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임윤주 시청자평가원 100년대 경영(경영학) 연세대학교(연혁의 역사)</p>